

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

IV. 내·외수 균형성장과 서비스산업 선진화

[주최] 헤럴드경제, 현대경제연구원

[일시] 2011. 04. 21 (木) 16:00~17:30

[장소] 롯데호텔 신관 14층 프레스룸

<사회>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

<발표>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

백웅기 상명대학교 부총장

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

헤럴드경제 정책세미나 - 2011년 4월 진행(案)



1. 시 기 : 4월 21일(목) 오후 4:00 ~ 5:30
2. 장 소 : 롯데호텔 **신관** 14층 프레스룸
3. 주 최 : 헤럴드경제, 현대경제연구원(HERI)
3. 大주제: **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**
 小주제: **② 내·외수 균형성장과 서비스산업 선진화**

〈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〉

구분	시간	주제 및 목차 (例示)	발표자
주제 1	10분	- 내·외수 균형성장을 위한 전략과 정책 과제 . 높은 무역의존도와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. 트리클다운 등 무역의 고용창출효과 제고의 필요성 . 내외수 균형성장의 의미와 중요성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	임종룡 차관(기획재정부)
주제 2	10분	- 내수 기반 확충과 경제시스템 안정화 방안 . 내수 확충을 통한 경제시스템 안정화의 중요성 .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-내수 선순환 . 수출과 내수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전략 . 부품소재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	백영기 부총장(상명대학교, 한국경제연구학회장)
주제 3	10분	-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내·외수 균형성장 전략 . 의료, 법률, S/W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. 음식숙박 등 자영업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 지원방안 . 서비스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	김주현 부원장(KDI)
종합토론			사회: 김주현(HERI 원장)
-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			

1. 내수·수출 균형성장을 위한 전략과 과제

임종룡 (기획재정부 차관)

 **목 차** 

1. 경제현황	1
2. 내수·수출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	2
3. 내수시장 부진의 원인	4
4. 대응방안	6
(1) 민간소비	6
(2) 기업투자	8
(3) 기타 (서비스 선진화, 취약부문 보호)	9

1. 경제현황

□ 우리 경제는 1·2차 오일쇼크, '97 외환위기 등을 겪었지만, '70년대 이후 빠른 산업화를 거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

○ **(GDP)** '10년 기준 1.0조불로서 세계 16위 수준

- 지난 30년간('80년 이후) GDP는 약 15배 증가(0.06조불→1.0조불)하였고, 상위 16개국중 중국*만이 우리나라보다 빠른 성장을 기록

* 중국 GDP(조불) : ('80)0.2 → ('10)5.7 : 약 28배 증가

○ **(교역량)** '10년 기준 8,916억불로 세계 9위 수준(세계 교역량의 2.9%)

* (수출) 4,664억불(7위), (수입) 4,252억불(10위)

□ 「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」이 빠른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

○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노출됨으로써 자발적인 생산성(경쟁력) 제고 노력 유도

* 연구개발비/매출액('09년, %) : (수출제조업) 2.42, (내수제조업) 1.32

○ 부족한 국내수요를 해외수요로 보충함으로써 기업에게 생산확대 및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(economy of scale) 실현 등의 편익 제공

□ 다만,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, 내수·수출간 불균형이 확대

<내수(민간소비+총고정자본)·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(명목, %)>

	'70년대	'80년대	'90년대	'00년대	'10
내수	94.0	85.4	86.5	83.7	81.1
수출(상품+서비스)	24.0	33.2	30.2	40.7	52.4

○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

* 수출비중('10, %) : **(한국)52.4** (미국)12.5, (일본)15.2, (영국)29.5, (독일)46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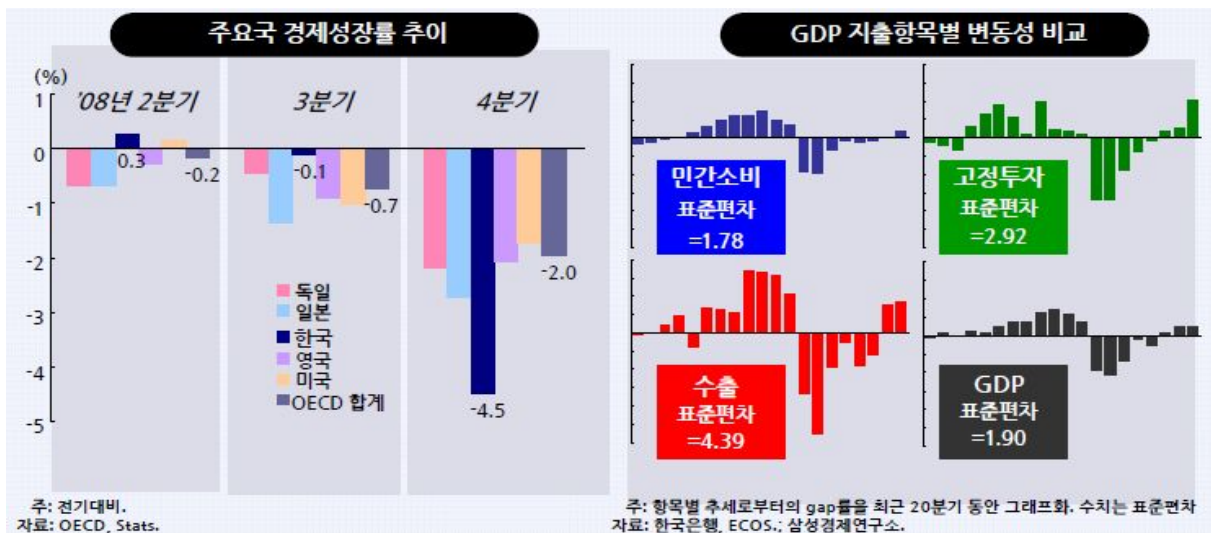
2. 내수·수출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

◇ 내수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수출 위주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(i)대외 경기변동에 취약해지고, (ii)향후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, (iii)경제부문별 불평등이 확대되는 문제가 우려

(1) 대외 경기변동에 취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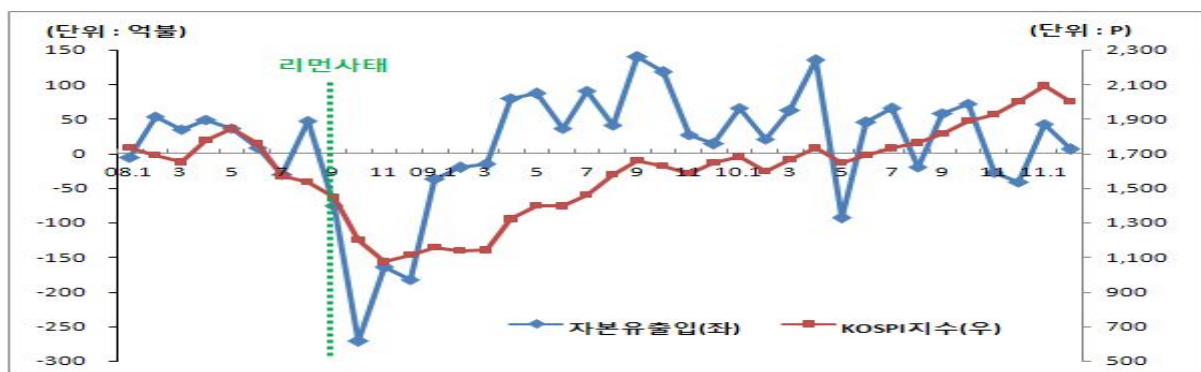
□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외경기에 따른 경기변동이 불가피

- * '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에 비해 경기가 큰 폭으로 변동,
- ** 우리나라의 GDP 지출항목중 수출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(삼성경제연구소, '10.12)



□ 특히,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금융·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우려

- * '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기 진원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, 해외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주가급락·환율급등



(2) 성장동력 약화

-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으로 주요 산업에 있어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며, 글로벌 경쟁도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

<주요 수출품의 전세계 생산능력과 수요('10, 출처: 지경부)>

	생산능력	세계수요	과잉공급	비고
자동차(백만대)	95	70	+25	·中 1위, 日 2위, 韓 5위
디스플레이(억불)	7,518	6,511	+1,007	·韓 1위, 日 3위, 中 4위

- 특히, 첨단기술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과의 격차 축소로 “Nut-cracker” 상황 심화 우려

* 한국-중국간 LCD 기술격차(한국=100) : ('07)91 → ('10^e)96 → ('15^e)98

* 미국 수입중 對韓수입, 對中수입 비중(%) : ('90) 3.7/3.1 → ('10)2.6/19.1

- 수출과 내수·고용 등과의 연계성 저하로 성장동력 역할 약화

*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: ('05)0.617 → ('06)0.609 → ('07)0.600 → ('08)0.533

* 수출의 취업유발계수(명/10억원) : ('00)15.3 → ('05)10.8 → ('08)9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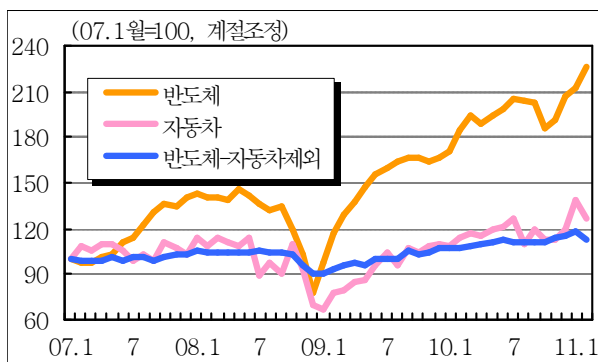
(3) 부문간 불평등 확대

- 수출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되면서, 수출/내수기업간, (수출중심의) 대기업/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 가능

- 최근 경기회복 과정에서 제조업이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, 수출 중심의 반도체·자동차 등 일부업종이 생산증가를 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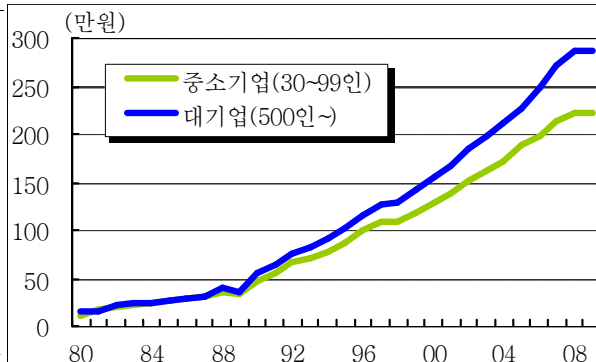
- 대기업/중소기업간 영업실적 격차가 대기업/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로 연결 ('80(만원): 11.7/15.1 → '09(만원): 221.7/286.4)

<제조업종별 생산 추이>



* 자료 : 통계청 KOSIS (광공업동향조사)

<대·중소기업 임금 추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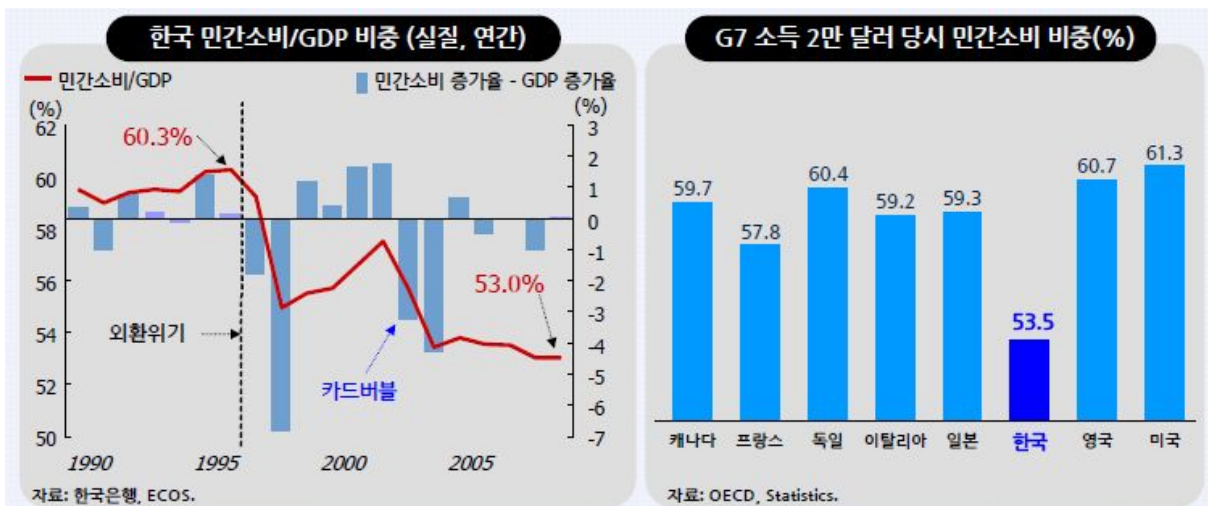
* 자료 : 통계청 KOSIS

3. 내수시장 부진의 원인

- ◇ **(민간소비)** 가계부채 확대, 가처분 소득 증가율 둔화 등으로 소비여건이 악화되고, 주거비·노후불안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
- ◇ **(투자)** 경제성숙화에 따른 투자기회 감소, 재무건전성 중심의 경영행태 변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확대 제약

(1) 민간소비

- **(현황)**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, 주요국의 1인당 GDP 2만불 당시와 비교해도 민간소비 비중이 낮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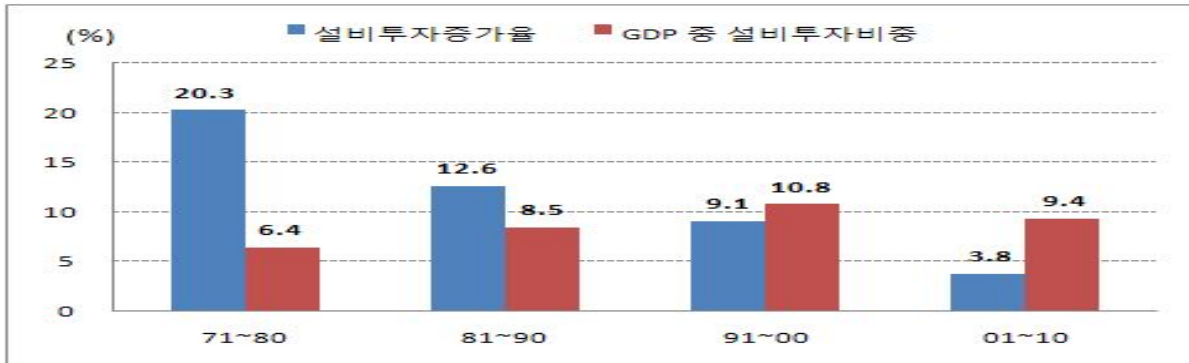
- **(부진의 원인)** 가계부채 확대에 의한 「가계채무구조 악화」, 중산층 감소 및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따른 「소득불안정성 증대」, 주거·노후불안에 따른 「소비심리 위축」 등이 원인으로 지적

* **민간소비 부진의 원인(예시)**

-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(% , '09) : (한, '10)146.1, (미)125.3, (일)109.4
- 중산층 비중(중위소득 50~150%, %) : ('06)64.3 → ('09)63.1
-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(%) : ('00)26.8 → ('05)36.6 → ('09)34.9
-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율(배) : ('00)5.0 → ('09)7.7
- 저축목적 중 노후생활대비 비중(국민은행, %) : ('00)18.4 → ('09)31.3

(2) (설비)투자

□ (현황) 우리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세는 둔화



□ (증가세 둔화 원인) 경제성숙화에 따른 「제조업의 성장 둔화」, 외환위기 이후 「기업의 투자행태 보수화」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

○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설투자가 둔화되고, 상대적으로 성장여력이 있는 서비스업 투자는 정체

* 제조업 성장률(연평균, %) : ('71~'80)9.1→('81~'90)9.8→('91~'00)6.6→('01~'10)4.2

* 총설비투자중 서비스업 비중 : ('05)38.2 → ('07)40.1 → ('09)39.1

○ 외환위기 경험 등으로 기업의 투자행태가 보수화되고, 금융기관 위험회피성향이 커진 것도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요인

* 제조업 사내보유율(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사내보유분 비중, %, 한은)
- ('90)83.5 → ('95)89.6 → ('00)89.1 → ('05)90.2 → ('09)92.6

* 예금은행 가계대출 비중(%) : ('98)27.7 → ('00)35.1 → ('05)49.8 → ('09)42.9

<참고> 건설투자 동향

○ 건설투자는 '00년대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

* 건설투자 증가율(연평균, %)

- ('71~'80)11.3 → ('81~'90)12.9 → ('91~'00)3.4 → ('01~'10)2.3

○ 다만,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미국,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건설투자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 곤란

*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(%) : (미, '09)7.8, (일, '08)11.8, (한, '10)15.1

4. 대응방안 (Balanced, Competitive & Protective Growth)

< 기본 방향 >

- ◇ **(확대균형 지향)** 수출 축소가 아닌 「내수 확대」를 통해 균형 회복
- ◇ **(경쟁력 제고)**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아니라 내수산업의 「경쟁력 제고」를 통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
- ◇ **(취약부문 보호)** 「성장의 과실이 사회 각 분야에 전파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이를 통해 내수·수출의 균형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

(1) 민간소비 : “안정성(safety & stability)” 제고에 주력

- ◇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, 주거·고령화 등 소비 심리 위축요인을 제거하여 민간소비의 건전한 확대 유도

□ **(가계부채 관리)**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,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유도

- 구체적인 가계부채 개선방안은 현재 운영중인 금융위 주관의 민관합동 TF*(11.1)의 논의를 거쳐 2/4분기중 발표 추진

* 금융위(주관), 재정부, 한은, 금감원, 연구기관, 시중은행 등 참여

<참고> 가계부채 개선방안(예시)

- LTV·예대율 규제 및 국제적으로 도입이 확정된 자본·유동성 규제(Basel III) 등을 통해 은행의 무리한 자산확대 억제
- 원금분할상환대출의 과도한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유도
- 잔액기준 COFIX 대출 및 금리상한 대출상품 활성화를 유도하여 금리인상에 따른 급격한 이자부담 증가 완화

□ **(주거·고령화 문제 해소)**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,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

○ 보금자리주택 공급('09~'18년간 150만호), 민간 주택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*

*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, 필요시 금융·세제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

○ 임금피크제, 퇴직연금 등을 통해 당면과제인 베이비붐 세대* 고령화에 대응하고, 중장기 교원수급계획('07)·주택수급계획('13~'22)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

* 한국전쟁 후 출산율이 급증한 '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둔화된 '63년까지 출생한 712.5만명('11년 현재 48~56세)

- (i) 일·가정 양립, (ii) 결혼·출산·양육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 및 가계 소비여력 확충 병행 추진

* (예)

-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(정액 50만원 → 임금의 40%, 상한 100만원)
-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(무급 3일 → 유급 3일, 필요시 무급 2일 추가)
-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(회당 150만원→300만원)
- 보육·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: 소득하위 50% → 70%

<참고>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의 최근 논의동향

- 제2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'11~'15, '10.10.26)
- VIP 신년연설('11.1.3), "100세 사회 종합대책과 전략" 마련 추진 선언
- '11.3.29, 국무회의 토론("베이비붐 세대 현황분석 및 정책방향 모색")

□ **(양질의 일자리 창출)** 건전한 소비유도를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노력 지속

○ 이를 위해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유도와 신성장동력 육성,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
(※ 세부내용 후술)

(2) 기업투자 : “기업가 정신(entrepreneurship)” 제고에 주력

◇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,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 확충 및 지속적 경제성장 견인

□ (기업환경개선) (i) 글로벌 스탠더드 지향*, (ii) 현장애로 해소**, (iii) 소통강화*** 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기업환경 개선 지속 추진

* 해외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, 우리 기업환경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추진(“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”, '11.4.6)

** 경제단체·협회·민간기업 등이 제기하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

*** 현장과의 소통강화 및 피드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하고,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의 창의성 발현을 유도

<참고> 이명박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대책 개요

○ 필요성 : 기업규제 개선은 **재원투입없이 경제성장을 촉진**

* 규제수준이 10% 낮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.3%p 확대(한은, '08)

○ 경과 :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제, 토지이용, 공정거래, 물류, 건설 등 총 10차례의 기업환경개선 대책 발표

○ 성과 : **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국내외 평가 제고**

*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: ('08)23위 → ('09)19위 → ('10)16위

* 전경련 규제개혁 만족도 : ('08)8.9% → ('09)27.1% → ('10)39.1%

□ (신성장동력 육성) 기후변화, 에너지 고갈 등 글로벌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 육성

○ 「**녹색성장**」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수립하여 3대 전략* 10대 정책방향 추진('09~'13년간 총 107.4조원 투입, 녹색성장 5개년 계획)

*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, 신성장 동력 창출,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

○ **3개 분야***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하여 5년간('09~'13) 총 17조원 투입 * 녹색기술, 첨단융합, 고부가서비스

<참고> 신성장동력 점검과 향후 정책과제('11.4.14)

- 신성장동력 산업화 조기 실현 : (예) 3년 이내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10대 전략 프로젝트* 및 7대 주력장비** 개발 지원 확대
 - * (예) 4세대 이동통신, 시스템 반도체, IT융합 병원, 문화콘텐츠 등
 - ** (예) 반도체, 디스플레이, LED, 그린수송, 바이오, 의료, 방송장비
- 금융과 인력 등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 : (예) On-lending 대출 및 기술평가보증 공급 확대*,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** 등
 - * 기보 신성장분야 기술평가 보증 : ('10)2.9조원 → ('11)3.7조원
 - ** Sector Council : 주요 산업별로 업종단체,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(현재 23개)
- 철저한 후속조치 및 이행점검

(3) 기타

□ (서비스산업 선진화)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 중점 추진

- 앞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·의료 등 (i) 핵심법안*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, (ii) 유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과제**를 선정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

* 의료법(원격진료 허용), 경제자유구역법(외국 의료·교육기관 유치 촉진) 등

** (의료) 해외환자 유치 확대, (관광레저)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

<참고>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개요

- **필요성** : 서비스산업은 성숙도가 낮아 발전의 여지가 큰 반면*, 제조업은 성숙단계 진입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한계**

*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('08)
 - OECD 19개국 중 18위(미국의 44%, 프랑스의 58%, 일본의 65%)
 ** 취업유발계수(명/10억원) 추이('00 → '08)
 - (제조업)13.2 → 9.2, (서비스업)21.5 → 18.3

- **추진경과** : '08~'09년중 총 5차례의 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*」과 '10년중 「유망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**」 마련

* 서비스수지 개선, 규제합리화, 인프라 확충, 내수기반 확충 등
 ** 콘텐츠·미디어, 사회서비스, 관광·레저, 교육, R&D, 보건·의료

□ **(취약부문 보호) 서민·빈곤층,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큰 의미의 “동반성장”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**

- **3대 서민우대금융(미소금융·햇살론, 새희망홀씨) 강화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여 나가고**

* 10만원 미만 소액연체 신용평가 미반영,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, 대출금리 최고한도 인하(연 44% → 39%) 등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의 「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」을 4.18일 발표

- **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확대,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서민·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**

- **건강하고, 경쟁력있는 대·중소 협력네트워크를 조성하고, 공정거래 질서 확립*,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** 등을 통해 대·중소 동반성장 환경 구축**

* 납품단가의 공정한 조정, 협력사 기술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처리('11.3월)

** 민간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('10.12월 발족)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도록 하고,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

참고1

수출의 적하효과(trickle-down effect) 저하

- ◇ 선도부문의 빠른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간 투입부문의 생산성이 낮아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 → 적하효과* 저하
- * 선도부문의 성과가 낙후부문으로 흘러넘쳐 양극화가 발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혜택을 누리는 효과

1. 생산측면

- 여타 제조업보다 수입의존도가 높고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IT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
 - * 산업연관효과('07, IT제조업/제조업평균)
 - 취업유발(명/10억원) 5.7/9.2
 - 설비투자 수입률(%) 63.1/37.1
 - 중간재 수입률(%) 50.1/28.4
- 불공정한 거래질서 등으로 대기업 순이익의 중소기업 유입이 차단될 경우에도 적하효과 감소

2. 소비측면

- 고급 소비제품 및 서비스업이 발달하지 못해 고소득층의 소비가 중·저소득층의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효과 약화
 - * 소비지출 증가율('00~'09년 평균, %) : 국내소비 6.2, 해외소비 11.6

3. 정책적 시사점

- 부품·소재 등 중간재 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 제고
-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

참고2 해외 주요국의 의료관광 현황

1. 싱가포르

□ '08년중 해외환자 수가 총 64.6만명(우리나라, '09년 6만명)이며, 숙박·유흥 등을 제외한 순수 의료관광 수입은 약 7.3억 달러

○ 높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치료뿐만 아니라 휴양 등의 개념을 접목시킨 복합패키지상품 등 다양한 의료관광 서비스 제공

* 싱가포르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86%가 만족하였으며, 이용자들이 6.2점/7.0점의 평가 부여(싱가포르 관광청, '08)

<싱가포르의 외국인 환자 수 추이(천명)>

구분	'03	'04	'05	'06	'07	'08	'12(전망)
해외환자수	230	270	350	410	571	646	1,000

2. 태국

□ '07년에 외국인 환자유치 규모는 154만명이며, 외화수입액은 11.1억 달러

○ 정부는 병원에 항공료, 스파, 마사지 등을 묶은 종합패키지 상품판매를 권유하는 한편, 민간병원은 치과, 심장, 안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강조한 특화상품 홍보

<태국의 외국인 환자 수 추이(천명)>

구분	'03	'04	'05	'06	'07	'08	'09
해외환자수	974	1,103	1,250	1,400	1,540	1,300	1,200

* '08년, '09년 해외환자 수 감소는 세계 경제위기와 함께 H1N1(신종플루) 확산 및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

참고3**싱가포르의 카지노 사업 육성전략****1. 배경**

- 그 동안 싱가포르는 도박 등을 금지하는 「도덕국가」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무역·금융산업 등으로 경제성장을 주도
- 하지만, 최근들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, 내수경제 활성화, 고용창출 및 외국 투자자본 유치 등을 위해 카지노산업을 육성

2. 현황

- '10년 복합리조트 2개를 신설하고, 카지노 영업 허가
 - * 카지노는 영업장 면적 4,500평 이하, 슬롯머신 2,500대 이하, 전체 면적 대비 카지노 영업장 면적 5%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
 - 리조트 월드 센토사(RWS) : 말레이시아 겐팅그룹이 44억불(약 5조원)을 투입하여 건설('10.2월 개장)
 - * 카지노, 동남아 최초의 유니버설 스튜디오, 세계 최대의 해양생태 공원 등 건립
 - 마리나 베이(Marina Bay) 리조트 : 美 샌즈(Sands) 그룹이 55억불(6.2조원)을 투입하여 건립('10.4월 개장)
 - * 카지노,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형 연회장, 극장, 스카이파크 등으로 구성

3. 경제적 효과

- '11년 싱가포르 경제성장(6~7%)의 약 25%는 리조트에 의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
 - * 2개 리조트는 '10년 50억불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'11년 65억불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(CLSA, Aaron Fischer)
 - ** 리조트 수익의 85~90%는 카지노에서 창출(마리나 베이 리조트 카지노 매출은 총면적의 3%, 센토사 카지노는 5%에 불과)(Economist誌)

참고4

내수-수출 균형 관련 IMF-OECD 권고사항

1. IMF(staff report for the 2010 article IV consultation)

- ◇ 대외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**비교역 부문(non-tradables sector)**을 강화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
 - (i)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, (ii) 서비스산업의 경쟁 촉진, (iii)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이 주요 정책과제

□ **비교역 부문의 생산성 제고**

-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촉진
- 진입규제 완화, FDI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을 활성화
- 수출부분에 대한 유리한 조세구조 개선

□ **노동·사회 정책의 개혁**

-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증대를 위해 **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 장치를 줄여나갈 필요**
 - * 다만, 고용보장 장치의 축소와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병행
-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**여성과 고령자의 경제참여율 확대**

2. OECD('11 Going for growth)

- ◇ 선진국과의 소득수준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저조(특히 서비스업)
- ◇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정책 추진과 위기 당시 확대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축소를 권고

- **(규제 완화)** 진입규제를 추가 완화하고,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등 FDI 규제 완화, 기업환경 개선 추진
- **(농업분야 지원 축소)** 가격지원 방식에서 「직접지원 방식」으로 전환
 - *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생산자 지원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수준
- **(조세효율성 제고)** 간접세 비중 확대 및 직접세의 세원 확대 추진
 - * OECD 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, 소득세·법인세의 과세기반이 좁고, 자영업자 소득과약률이 낮으며, 개별소비세가 복잡하고,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부족
- **(정규직 보호 완화)**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,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고, 노동시장 전반의 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 인센티브를 축소
 - *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(dualism)가 심화되었으며,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인적자본형성, 생산성 향상과 형평성을 저해
- **(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지원)** 민간부문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 확대 및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, 비정규직 차별 축소 및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한 성차별 완화
 - * 25~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2%로 OECD 국가중 하위 4번째 수준

2. 내수 기반 확충과 경제시스템 안정화 방안

백용기 (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, 상명대학교 부총장)

(1) 내수와 수출 변화 추이

□ GDP에 대한 내수 비중은 하락, 수출 비중은 증가

- 내수를 민간소비와 총고정투자의 합이라고 정의한다면 1970년의 내수 비중은 GDP의 102%였으나 2010년에는 78.7%로 크게 하락
- 반면에 수출 비중은 1970년에 GDP의 4.2%로 미약했으나 2010년에는 49.3%까지 높아짐

(2) 2003년 이후 내수와 수출의 성장 기여율 변화

□ 지난 4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 내수와 하강 추세를 보인 수출은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임

-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전까지는 내수가 수출에 비해 성장 기여율이 항상 높았음
- 그러나 1997년에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내수가 크게 둔화하자 처음으로 수출기여율이 내수기여율을 상회하였음
 - 내수 기여율 31% < 수출 기여율 69%
 - 내수 기여도 1.8% < 수출 기여도 4.0%
- 1998년부터 다시 내수 기여율이 수출 기여율을 앞질렀으나, 2003년에 내수와 수출 기여율이 역전된 이후에는 2005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줄곧 수출 기여율이 내수 기여율보다 높았음
 - 2005년 내수 기여율 77% > 수출 기여율 74%
 - 내수 기여도 3.0% > 수출 기여도 2.9%
 - 2009년 내수 기여율 -85% > 수출 기여율 -174%
 - 내수 기여도 -0.3% > 수출 기여도 -0.6%
 - 2010년 내수 기여율 66% > 수출 기여율 108%
 - 내수 기여도 4.0% > 수출 기여도 6.6%

(3) 내수-수출 비중의 국제 비교

□ 2000~2009년의 기간 중 G7 국가의 내수-수출 비중의 변화는 다양함

- 독일, 일본, 미국의 내수 비중은 줄어든 반면에 이탈리아, 영국, 프랑스, 캐나다의 내수 비중은 증가

- 한편, 수출 비중은 독일, 일본, 미국, 영국은 증가하였으나 이탈리아, 프랑스, 캐나다는 감소
 - 캐나다의 내수 비중과 수출 비중의 변동폭이 가장 큼

<표 1> G7의 내수-수출 비중 변화(% , %p)

	2000 ▶ 2009	2000 ▶ 2009
	내수 비중	수출 비중
독일	80.3 ▶ 76.5(-3.8)	33.4 ▶ 40.8(+ 7.5)
일본	81.4 ▶ 77.7(-3.7)	11.0 ▶ 12.9(+ 1.9)
미국	88.0 ▶ 86.9(-1.1)	10.6 ▶ 11.6(+ 1.0)
이탈리아	80.2 ▶ 80.6(+ 0.4)	27.1 ▶ 24.0(-3.0)
영국	79.5 ▶ 80.5(+ 1.0)	24.8 ▶ 25.8(+ 1.0)
프랑스	75.2 ▶ 80.3(+ 5.1)	28.6 ▶ 26.6(-2.0)
캐나다	75.6 ▶ 85.1(+ 9.5)	44.3 ▶ 32.5(-11.9)

자료: OECD, STATS DATABASE.

-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일랜드의 내수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으며, 호주의 내수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났음
 -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내수 비중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일랜드에 비해서 약간 덜 줄었음
 -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은 매우 크게 증가하였음
 - 2000~2009년 기간 중 15.3%p 증가하여 G7 중 가장 많이 증가한 독일보다 크게 증가
 - 우리나라와 아일랜드에서는 1970년 이후 추세적으로 내수 축소, 수출 확대의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

<표 2> 한국, 아일랜드, 호주의 내수-수출 비중 변화(% , %p)

	1970년	2000 ▶ 2009	2000 ▶ 2009
	내수/수출 비중	내수 비중	수출 비중
한국	102.2/4.2	86.5 ▶ 79.9(-6.6)	30.6 ▶ 45.9(+15.3)
아일랜드	101.0/19.2	75.9 ▶ 67.4(-8.5)	80.2 ▶ 86.6(+6.4)
호주	70.9/10.4	74.2 ▶ 84.7(+10.5)	22.1 ▶ 20.0(-2.1)

자료: OECD, STATS DATABASE.

(4) 성장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위협

- 대규모 대외 충격에 따라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 받음
 - 1979~1981년: 8.4% → -1.9% → 7.4% (1980년 제2차 오일쇼크)
 - 1997~1999년: 5.8% → -5.7% → 10.7% (1998년 외환위기)
 - 2007~2010년: 5.1% → 2.3% → 0.3% → 6.2% (2008~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)
 - 외부적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의 큰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움
 -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환율 불안정도 불가피
 -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화 환율의 불안정성이 가장 컸음

(5) 수출 확대의 거시적 요인

- 국제 교역량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 확장에 기여하였음
 - 1981~2010년까지 세계 GDP 증가율과 교역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GDP에 비해 교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
 - 1990년대의 교역 증가율은 1995년 WTO 발족과 더불어 크게 증가
 - 2011~2012년 IMF의 세계 교역량 전망치는 각각 7.4%, 6.9%로 지난 10년의 증가율을 상회
 - 수출이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해 온 우리나라에게는 세계 교역량 증대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신장

<표 3> GDP 증가율 및 교역 증가율(%)

	GDP 증가율	교역 증가율
1981~1990	3.3	5.0
1991~2000	3.2	7.4
2001~2010	3.6	4.8

자료: IMF, DATABASE.

-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였음
 - 1996~2005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터키와 공동 4위인 3.7%에 달하여 OECD 전체 평균치인 1.8%를 상회
 - 이 기간 중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OECD 국가는 폴란드(4.7%), 슬로바키아(4.4%), 슬로베니아(4.0%), 한국과 터키(3.7%) 순
 - G7 국가 중에서는 미국(2.2%)이 가장 높았으며 이탈리아(0.3%)가 최저치 기록

2. 내수 기반 확충과 경제시스템 안정화 방안

- 2006~2010년 기간 중에도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슬로바키아(4.2%)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평균치 0.9%를 훨씬 상회

<표 4> G7의 노동생산성 증가율(%)

	1996~2005	2006~2010		1996~2005	2006~2010
OECD	1.8	0.9	이탈리아	0.3	-0.7
한국	3.7	3.0	일본	1.3	0.6
캐나다	1.3	0.0	영국	1.9	0.3
프랑스	1.2	0.4	미국	2.2	1.5
독일	1.0	0.4			

- 우리나라는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환율 상승률에 힘입어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음
 - 2000~2010년 기간 중 유로권을 제외한 19개국의 환율 변동률은 터키(138.5%), 아이슬란드(54.5%), 멕시코(33.7%), 한국(2.0%) 순으로 높았음

<표 5> G7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(%)

	1996~2005	2006~2010		1996~2005	2006~2010
OECD	2.4	2.0	이탈리아	2.3	2.9
한국	2.1	1.9	일본	-1.5	-0.4
캐나다	1.9	2.9	영국	2.8	2.8
프랑스	1.5	2.0	미국	2.1	1.5
독일	0.0	0.9			

□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음

- 2005년의 실질실효환율을 100이라고 했을 때, CPI를 기반으로 한 원화의 2009년 실질 실효환율은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32위이며 2010년에도 32위 예상
 - 아이슬란드 47.7, 한국 73.4, 멕시코 78.7, 영국 79.5 (2009년 실적치)
 - 아이슬란드 48.9, 한국 78.9, 영국 79.2, 멕시코 83.2 (2010년 전망치)
- G7 국가의 실질실효환율은 캐나다(104.8), 일본(111.2), 프랑스(103.9), 독일(104.6)은 100 이상으로 2005년에 비해 고평가된 반면, 미국(95.7)과 영국(79.5)은 2005년에 비해 저평가되었음
 - 자료: OECD Economic Outlook, Volume 2010, Issue 2 No. 88, Dec. 2011.

(6) 수출 의존형 성장 패턴 부작용

- 수출 의존형 성장 패턴은 수출-내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
 - 상당 기간 동안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 및 건설투자는 부진하면 수출-내수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
 - 수출-내수 양극화가 발생하면 주요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 또는 기업간 성과도 차별화되고 있음
 - 우리나라의 수출-내수 양극화는 세계화 등의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면도 있지만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시행의 결과일 수 있음
 - 실질실효환율의 저평가

- 수출-내수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은 trickle-down effect(낙수효과, Hirschman(1958))가 잘 발휘되지 못한다는 점과 내수 부진을 들 수 있음
 - 트리클다운 효과가 미진한 것은 수출 선도 부문의 성과가 내수 부문으로 원활하게 파급되지 못하기 때문
 - 내수 부진은 수출-내수의 양극화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(IT산업, 중화학공업, 제조업)과 내수산업(비IT산업, 경공업, 서비스업)간의 양극화를 심화
 - 내수 중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은 가계부채의 과다와 반복적인 위기 발생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등으로 민간소비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
 - 기업들은 안정성 위주의 보수적 경영형태 및 적정 이윤 확보를 위한 투자기회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설비투자 기피 경향
 -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및 DTI, LTV 등의 규제 조치로 건설투자 부진

- 수출-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장애요인이 됨

(7) 내수 확장을 위한 정책 방향

- 수출-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
 - ‘수출 증가 → 투자와 고용 증가 → 소비 증가’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소재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
 - 산·학·연 연계강화, R&D 투자의 효율성 제고, 대학의 기초연구기능 확대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수입의존적 산업구조 개선

- 위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위축 요인 제거
 -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활동과 관련된 제반 규제를 최대한 완화
 -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경감, 미래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

-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 전략
 - 수출의존형 성장 전략 채택 국가는 대외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 필요
 -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에서 고용친화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해야 경제양극화 해소에 도움
 - 수출-내수 연계가 튼튼하려면 부품··소재 생산기업의 생산성 제고 필요
 - 부품·소재의 국산화에 주력하여 수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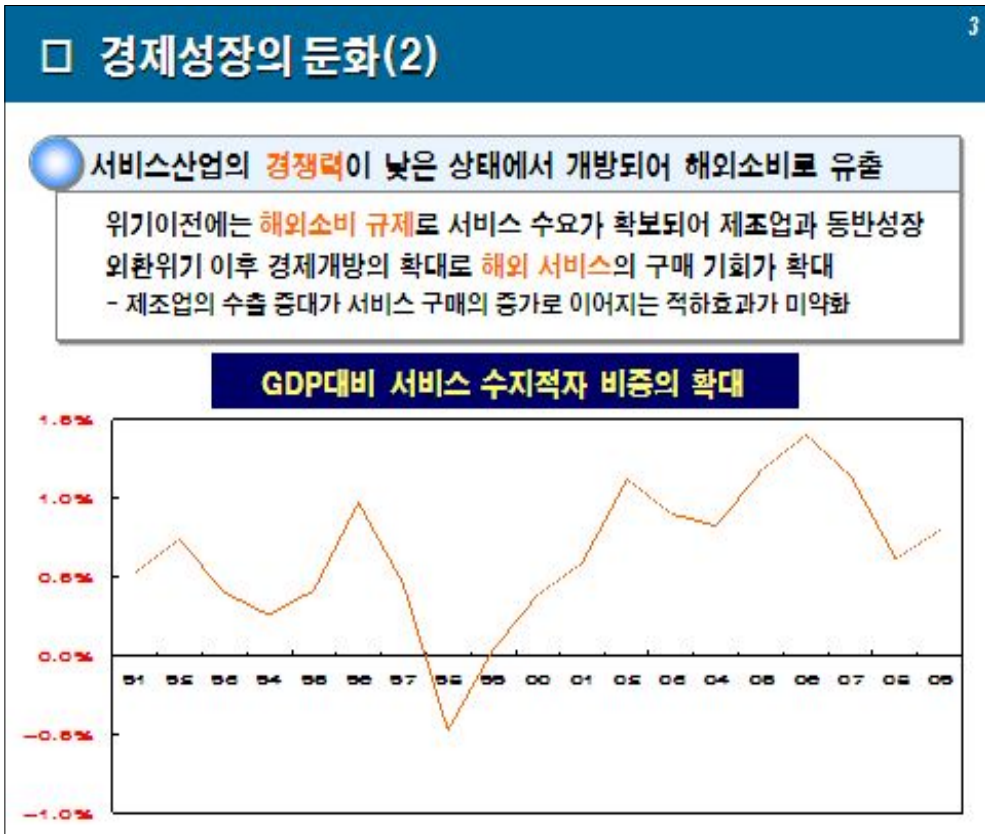
- 서비스 산업의 성장 전략
 - 제조업이 중심이 된 수출의존형 성장전략은 불안정함
 - 제조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요구함
 - 일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성장에 크게 기여해야 함
 - 첨단과학 및 지식과 융합된 서비스업부터 순차적으로 개방
 - 국제경쟁에 노출되지 않으면 경쟁력 갖기 어려움
 - 정부의 개입과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
 -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노동력의 불일치 해소

- 내수 확장을 위한 유동성 확장이나 재정지출의 확대, 감세 조치 등은 예상하는 효과에 비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선부른 시행 자제
 - 유동성 확장을 비롯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지금과 같은 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내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음
 -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조치 등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민간이 미래의 조세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면 내수 부양 효과는 없음

3.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내·외수 균형전략

김주훈 (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)

<h1>차 례</h1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I. 서비스산업의 중요성II. 서비스산업이 처한 구조적 문제III.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I. 서비스산업의 중요성



II. 서비스산업이 처한 구조적 문제

□ 서비스산업의 이중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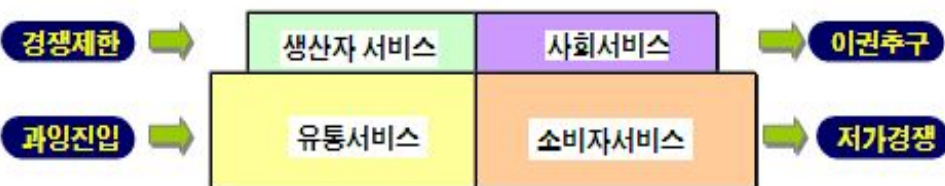
5

● 경쟁제한적 지식기반서비스와 과당경쟁적 노동집약서비스의 이중구조

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수익은 혁신보다는 경쟁제한적 이익의 실현 결과
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에서는 진입장벽이 낮아 과당경쟁 초래
 - 저숙련 인력의 과잉 진입에도 불구하고 **퇴출 저항**, **출혈적 가격경쟁**을 보임

→ 서비스산업 선진화: 지식기반업종의 경쟁촉진 + 노동집약업종의 전직훈련

한국 서비스산업 구조의 개념도



6

□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

서비스 수요의 **고급화**로 기업화 및 전문화 업체들이 높은 성장

기업화 및 전문화 업체로 추정되는 **20인 이상 규모 업체**들이 고성장
생계형 및 영세 서비스업체들은 매출감소 및 퇴출 등 구조조정 압력

한계상황에 처한 **저소득층**의 복지대책 요구가 분출

서비스산업의 규모계층별 성장('00~'06년)

구 모	고 용	매 출
총 계	2.2%	7.6%
1~4인	- 2.2%	4.2%
5~9인	5.8%	6.2%
10~19인	3.0%	6.4%
20인 이상	11.5%	11.9%

7

□ 진입제한의 문제

자격제도에 의한 **진입장벽**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이 제약

543개 서비스 업종 중 약 1/3의 업종에서 진입장벽이 부과
 한국의 **변호사 1인당 국민수**는 OECD 최고 수준

- OECD는 **로스쿨 정원**의 상향 조정 및 공극적 폐지등 권고(2008 한국보고서)
 자격사취업 비중이 높은 **사업서비스**의 성장이 OECD 평균보다 저조

GDP 대비 사업서비스 비중의 증가('95~'05)

국가	1995	2005
미국	21.9%	24.9%
영국	18.1%	23.4%
독일	21.8%	24.9%
프랑스	22.8%	27.4%
일본	18.9%	20.9%
한국	11.5%	12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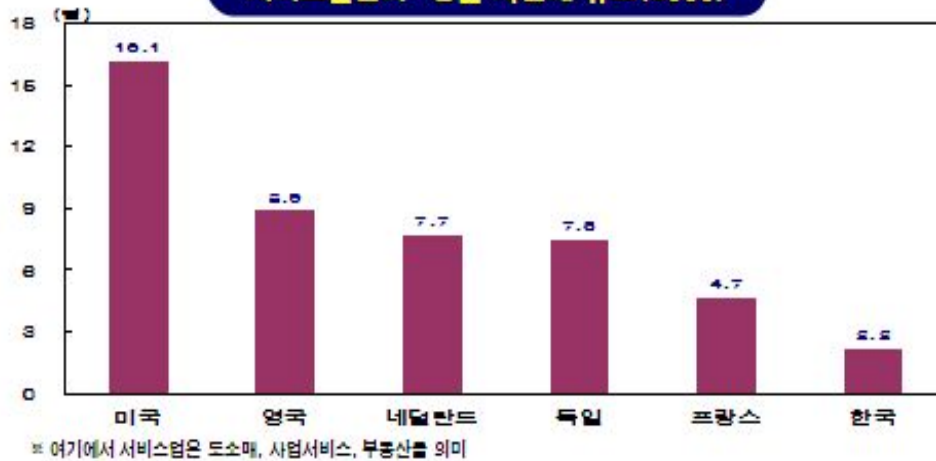
□ 자본유입의 문제

8

서비스산업의 기업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한 **자본유입**에 애로

담보위주의 금융관행으로 **무형자산**에 기초한 서비스업체의 자본확충에 애로
 더욱이, 의료업 등에서는 **규제**로 인해 외부자본의 유입이 차단

서비스산업의 평균 사업체 규모(2005)



III.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

□ 정책과제(1)

9

과제 1 법률, 의료 등 전문서비스업종의 **진입장벽 완화**

산업으로서 성장: 개인사업체에서 **서비스 전문기업**으로 전환될 필요
 - 대형화, 전문화를 위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제도적 장벽 타개
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정착에 따른 법률, 의료 등 잠재적 수요 증가에 대처
 - 사회적 특권층에서 전문 서비스 공급자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
 전문서비스업의 기업화로 **조직내 비숙련 인력**들에 대한 고용흡수 기회

과제 2 도소매,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**퇴출전략** 추진

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**과잉진입**이 해소될 필요
 -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**퇴출**되어 나오는 인력들이 생계형 자영자층 형성
 정부지원은 **전업**에 필요한 과정에 집중될 필요
 - 잔류하는 생계형 서비스업자에게 가장 큰 손해는 과당경쟁의 해소
 퇴출지원과 고용 및 복지대책이 연계될 필요
 - 전업과정의 생계보장과 재훈련 지원이 관건

□ 정책과제(2)

10

과제 3 서비스 수요의 고급화 추세에 대응한 **교육훈련의 강화**

서비스 혁신은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특성
 -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제조업의 대량생산체제와 대비
 - 과거 경제개발의 토대가 되었던 일사불란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필요
창의적 능력 개발에 집중된 교육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필요
 - 대학이 수요지향적이며 경쟁적 풍토로 개선될 필요

과제 4 서비스 경제화의 **추진 속도** 적정화

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경제의 **체질 개선**을 의미
 - 이미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갈등과 저항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
 단기적 성과평가를 지양하여 급진적 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
 - 장기적 프로그램에 의해 점진적이며 확고하게 개혁과제를 추진